

현안과 과제

■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 노력해도 계층상승 어렵다는 응답이 81%로 6%p 상승

Executive Summary

□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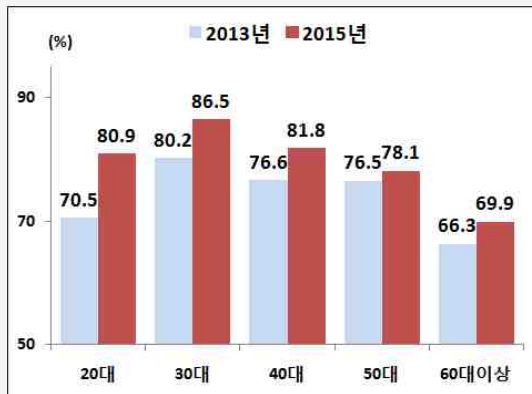
■ 계층상승 사다리와 경제성장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휘되어 경제 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진다. IMF(2015)와 OECD(2015)도 소득분배가 악화될수록 경제성장이 저해된다는 연구를 내놓은 바 있다. 2013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설문조사를 실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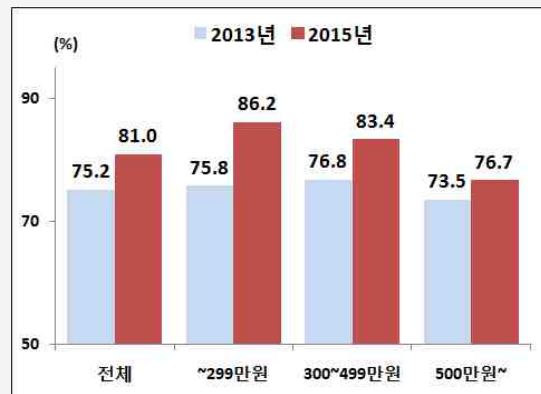
■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첫째,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자산이 적은 20대에서 크게 악화되었다.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2013년 75.2%에서 2015년 81.0%로 5.8%p 상승하였다. 특히 20대 청년층이 70.5%에서 80.9%로 10.4%p 악화되었는데, 청년층의 실업률(8.0%→10.0%)과 비정규직 비중(29.7%→30.9%)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도 75.8%에서 86.2%로 10.4%p 악화됐고, 순자산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경우는 78.6%에서 84.8%로 상승했다.

< 계층사다리 인식 : 연령별 >



< 계층사다리 인식 : 월소득수준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는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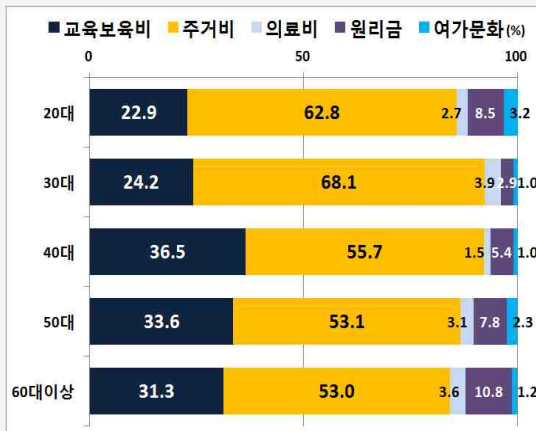
둘째, 국민 대다수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에서 부정적 응답률이 높았다.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률(2015년)이 90.7%에 이르고, 특히 30대는 94.2%에 달했다.

셋째, 국민들은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주거비 부담과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과도한 주택구입비와 주거비 부담이라는 응답이 59.8%에 달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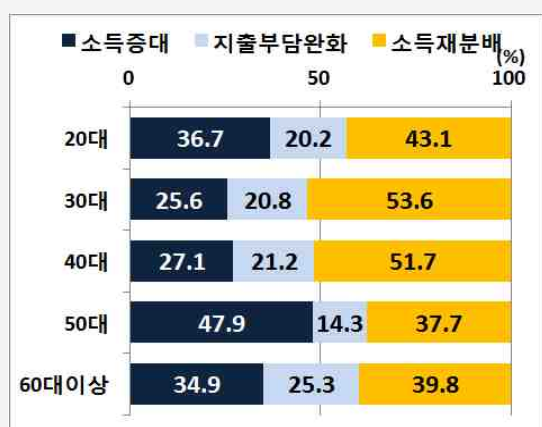
고, 과도한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꼽은 응답자도 29.2%에 이르렀다. 반면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 과도한 의료비, 부족한 문화여가비라는 응답은 각각 6.4%, 2.8%, 1.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 세대는 주거비 부담이, 4050 세대는 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민들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소득중대 및 지출부담 완화 정책 응답률도 높은 수준이다. 응답자의 46.7%는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 확대'를 꼽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는 33.0%,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출 부담 완화'는 20.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3040세대에서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50대 베이비붐세대는 소득중대 정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일자리대책을, 60세 이상 고령층은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 중산층 삶의 걸림돌 : 연령별 >



< 계층사다리 강화정책 : 연령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시사점

개인의 자발성과 경제사회적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가계소득 증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생애주기별로 생계부담 요인을 완화해야 한다. 2030세대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확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을 통해 신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40~50대를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60대 고령층에게는 주거비 및 의료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셋째,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되, '일하는' 복지가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넷째, 교육과 벤처를 통해 계층 상승이 가능하도록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완화해 일자리 상승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

1. 계층상승 사다리와 경제성장

- (연구배경)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할수록 경제 활력이 커지고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나, 최근 계층상승에 대한 국민인식이 악화되고 있음
 -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 즉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휘되어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짐¹⁾
 - 중산층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로서, 중산층이 두텁고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해야 사회갈등이 감소하고 경제발전도 가능
 - IMF(2015)²⁾는 경제성장을 위해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의 소득 향상이 필요하며, 부의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 전체 소득 중에서 5분위 계층(상위 20%)의 몫이 1%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0837%p 하락³⁾하여 부의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 반면 1~3분위 계층의 몫이 1%p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각각 0.381%p, 0.325%p, 0.266%p 상승
 - 경제성장을 위해 저소득층과 중위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중요함을 시사
 - OECD(2015)⁴⁾도 소득불평등 확대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지니계수⁵⁾를 통해 1985년~2005년간 소득불평등 추세와 1990~2010년까지 경제의 누적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기간 소득 불평등 심화로 OECD 평균 누적 성장률이 4.7%p 감소⁶⁾

1) 현대경제연구원(2013),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해야”, 현안과 과제 13-45.

2) IMF(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3) 4분위 계층의 소득이 1%p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0596%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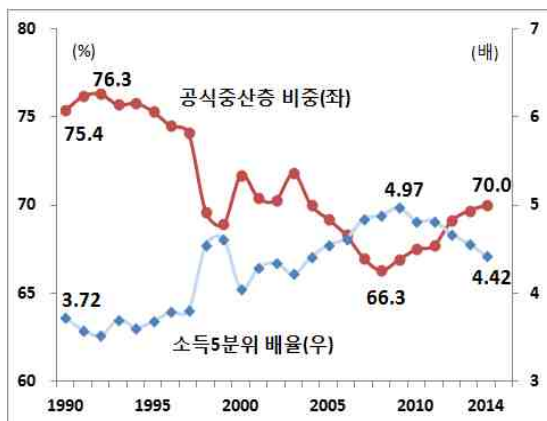
4) OECD(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5) 소득분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

6) OECD 국가 평균 1990~2010년 누적 경제성장률은 약 28%인데, 1985년~2005년까지 소득분배 상태가 불변이라면 1990년~2010년 누적 경제성장률은 약 33%에 달했을 것이라는 의미.

-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점차 개선되는 반면, 국민 인식은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OECD 기준 공식중산층 비중은 1990년 75.4%에서 2008년 66.3%로 저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개선되면서 2014년에는 70.0%를 기록
 -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도 1990년 3.72배에서 2009년 4.97배로 고점을 찍은 이후 2014년에 4.42배로 개선 추세
 - 하지만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 비중은 2009년 54.9%에서 2013년 51.4%로 3.5%p 감소. 공식중산층이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 (통계청)
- 최근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되고 있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우려
 -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계층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이 2013년 75.2%에서 2015년 81.0%로 5.8%p 증가
- (연구목적) 설문조사를 통해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
-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며, 유선전화 설문으로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45%p임
 - 응답자 특성은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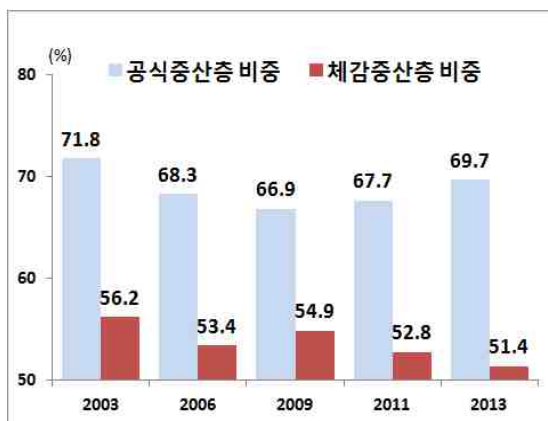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공식중산층 비중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 공식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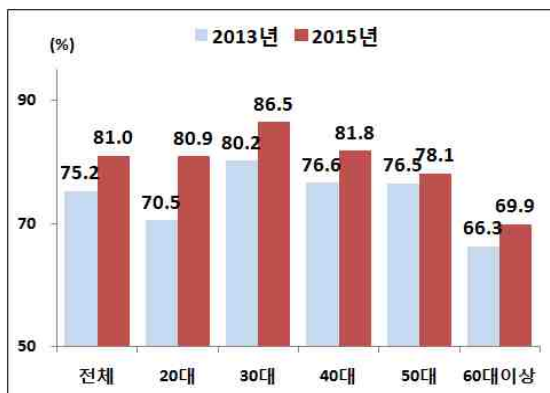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체감중산층은 2~3년마다 조사).

주 : 공식중산층 비중은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2.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 ①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자산이 적은 20대에서 크게 악화
- (전체)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3년 75.2%에서 2015년 81.0%로 5.8%p 상승
 -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계층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1.0%는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답함.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19.0%에 불과
 - 부정적인 응답률이 2013년 설문조사 때의 75.2%보다 5.8%p 상승
- (연령별)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연령층은 30대이고, 지난 2년간 가장 크게 악화된 것은 20대 청년층임
 - 20대 청년층 :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
 -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률이 2013년 70.5%에서 2015년 80.9%로 무려 10.4%p나 상승
 - 20대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부담이 적고, 좋은 직장을 얻어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2013년 8.0%에서 2015년(1~7월) 10.0%로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같은 기간 29.7%에서 30.9%로 증가하면서 계층상승 인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계층사다리 인식 : 연령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는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 비율.

< 청년층 실업률 및 비정규직 비중 >



자료 : 통계청.

주 : 2015년은 1~7월 평균.

- 30대 :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깊은 연령층
 -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률이 2013년 80.2%에서 2015년 86.5%로 고공행진 지속
 - 30대는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고, 교육비 부담도 점점 커지는 연령층임
 -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계층상승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거비라는 응답이 68.1%에 달하고, 교육보육비라는 응답은 24.2%임
 - 또한 30대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사회에 진출한 세대이자 2008년 부동산가격 급락으로 하우스푸어로 추락한 경우가 많은 세대
 - 소득 및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됨

- 40대 : 계층상승 인식이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부정적
 -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률이 2013년 76.6%에서 2015년 81.8%로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 지속
 - 가구소득은 높은 편이나 주거비 부담과 교육비 부담으로 계층상승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 40대 응답자 가구의 월가처분소득은 469만원으로 응답자평균 428만원보다 많지만,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교육보육비라는 응답은 36.5%로 전체 평균(29.2%)보다 높은 편임. 또한 주거비가 걸림돌이라는 응답이 55.7%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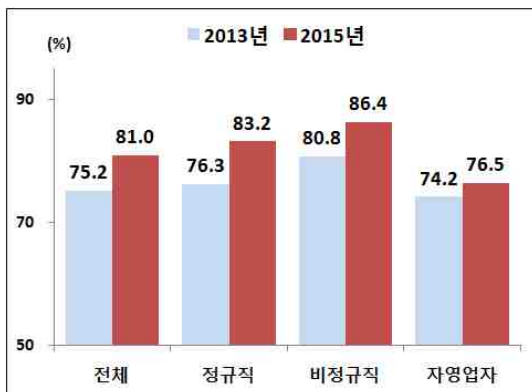
- 50대 베이비붐세대 : 계층상승 인식이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긍정적
 -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2013년 76.5%에서 2015년 78.1%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체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 지속
 - 50대 베이비붐세대는 1980년대에 사회에 진출해 고도성장을 경험한 세대로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50대 응답자 가구의 월가처분소득은 516만원으로 응답자평균보다 많고, 순자산도 5.5억원으로 응답자평균 3.3억원을 크게 상회
 - 다만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이 크고 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노후준비 부족은 불안 요인.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거비라는 응답이 53.1%, 교육보육비라는 응답은 33.6%로 높은 편임

- 60세 이상 고령층 : 계층상승 인식이 전체 평균보다 매우 긍정적
 -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2013년 66.3%에서 2015년 69.9%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 지속
 - 해방 전후에 태어난 60대 이상 고령층은 1960~1990년대 고도 성장기를 경험하면서 계층상승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
 - 60세 이상 응답자 가구의 월가처분소득은 286만원으로 응답자평균보다 크게 적지만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이 적어 계층상승 인식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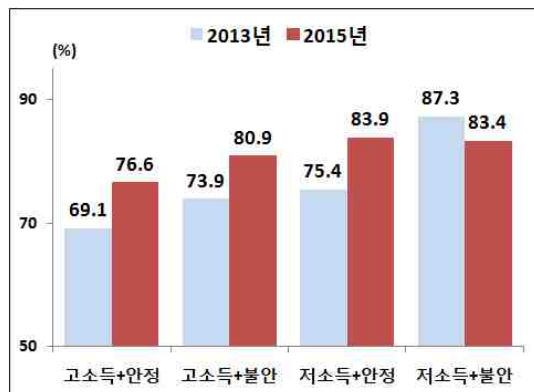
○ (일자리특성별) 질 낮은 일자리 종사자뿐만 아니라 질 높은 일자리 종사자도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 종사상지위별 :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가 계층상승 인식이 더 악화
 -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13년 80.8%에서 86.4%로, 정규직 근로자는 76.3%에서 83.2%로 상승. 임금 정체 및 고용 불안으로 계층상승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됨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는 74.2%에서 76.5%로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 최근 내수부진에 따른 소득 정체에도 불구하고 계층상승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일자리특성별 :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도 계층상승 인식 악화
 - 일자의 질이 높은 계층(고소득+안정)의 경우 부정적 인식이 2013년 69.1%에서 76.6%로 상승. 일자의 질이 낮은 계층(저소득+불안정)은 87.3%에서 83.4%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계층사다리 인식 : 종사상지위별 >



< 계층사다리 인식 : 일자리특성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1) %는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 비율.
 2) 종사상지위, 일자리특성은 가구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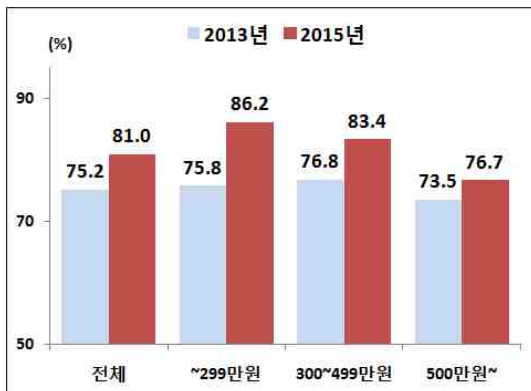
○ (소득수준별) 저소득층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월소득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률이 2013년 75.8%에서 2015년 86.2%로 10.4%p 급등
 -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73.5%에서 76.7%로 3.2%p 상승에 그침
- 이는 공식중산층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중산층은 오히려 약화되는 현상과 일맥상통
 - 공식중산층 비중은 2008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2013년 69.7%에서 2014년에는 70.0%까지 상승
 - 하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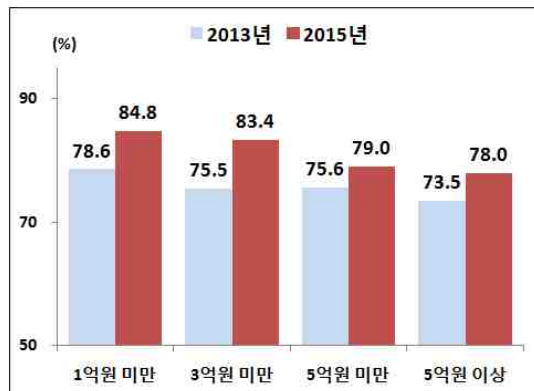
○ (자산규모별) 순자산규모가 작을수록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 악화

- 순자산 규모가 작은 경우 계층상승이 어렵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
 - 순자산 규모가 1억원에서 3억원 미만인 경우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률이 2013년 75.5%에서 2015년 83.4%로 7.9%p 상승
- 한편 순자산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부정적인 응답률이 같은 기간 73.5%에서 78.0%로 4.5%p 상승
 - 순자산 규모가 3억~5억 미만인 경우 부정적인 응답률은 75.6%에서 79.0%로 4.4%p 상승

< 계층사다리 인식 : 月소득수준별 >



< 계층사다리 인식 : 순자산규모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1) %는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 비율.

2) 월소득은 세후소득 기준, 자산은 순자산 기준.

② 국민 대다수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순자산이 1억~3억원 미만인 경우 부정적 응답률이 높음

- 전체 : 인구 특성이나 경제적 특성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걸쳐 부와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시각 팽배

-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0.7%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
- 매우 심각하는 응답이 31.1%,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이 59.6%를 차지한 반면, 심각하지 않은 편,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8.5%, 0.7%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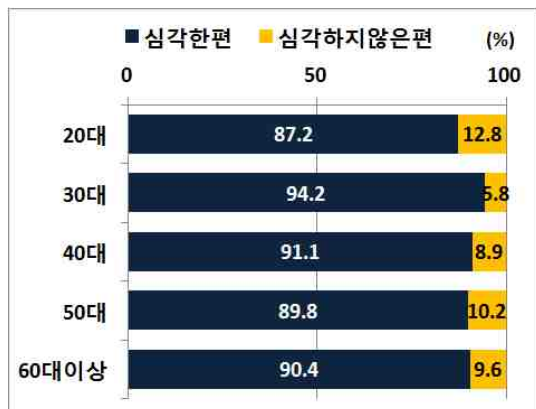
- 연령별 : 부와 자산의 대물림에 대해 30대가 매우 부정적인 반면 20대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률이 낮음

- 부와 자산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0대는 87.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30대 들어 94.2%에 급등하는 양상
- 20대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30대 들어서는 취업 및 소득, 자산 형성에 대한 불공정한 기회를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됨

- 순자산규모별 : 순자산규모가 중간 수준인 경우 부정적 인식이 강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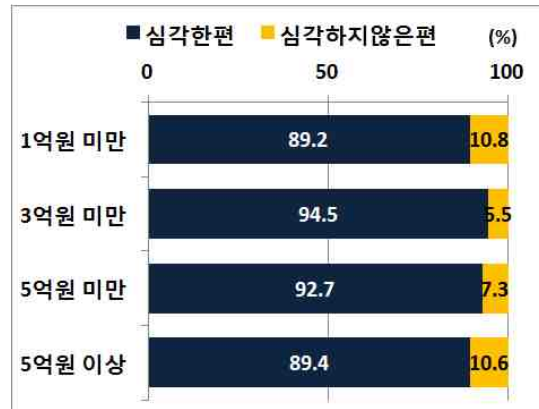
- 순자산규모가 1억~3억원 미만인 경우 부와 자산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94.5%에 달함

< 부와 가난의 대물림 : 연령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부와 가난의 대물림 : 순자산규모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③ 국민들은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을 꼽음

- 전체 : 주거비 및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크고, 부채상환 및 의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9.8%는 과도한 주택구입비와 주거비 부담을, 29.2%는 과도한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꼽음
-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 과도한 의료비, 부족한 문화·여가비라는 응답률은 각각 6.4%, 2.8%, 1.7%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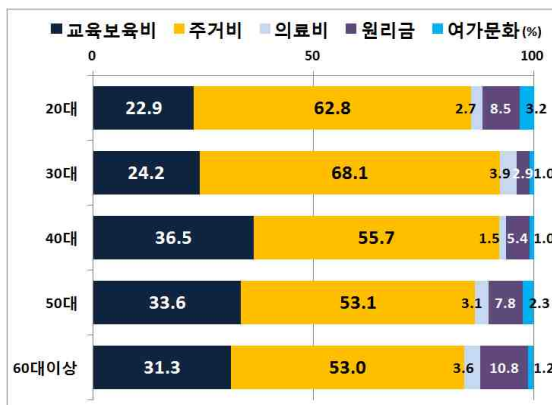
- 연령별 : 2030세대는 주거비, 4050세대는 교육비 부담 때문에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30대의 주거비 부담은 68.1%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20대에서도 62.8%를 기록
- 사교육비 부담이 큰 40대와 50대는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각각 36.5%, 33.6%로 전체 평균(29.2%)보다 높음. 한편 60대 이상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 순자산규모별 : 순자산규모가 커질수록 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순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응답률이 34.1%로 높은 반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5.3%로 낮은 편. 순자산규모가 클수록 교육열이 높아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순자산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

< 중산층 삶의 걸림돌 : 연령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중산층 삶의 걸림돌 : 순자산규모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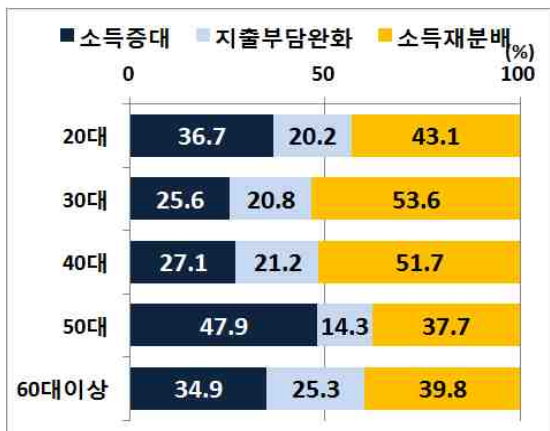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④ 국민들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득증대 및 지출부담 완화 응답도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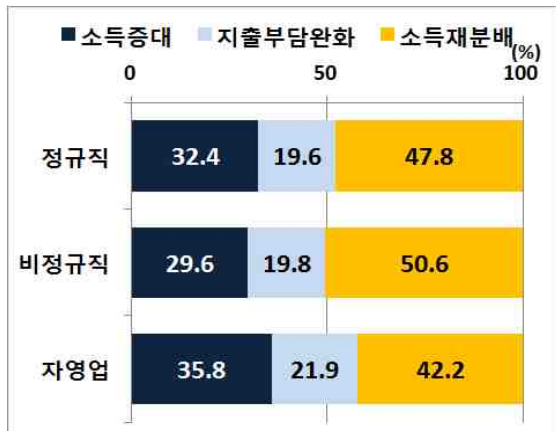
- 전체 :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6.7%는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 확대’를 꼽음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는 33.0%,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출 부담 완화’는 20.3%를 차지하여 비교적 고르게 분포
- 연령별 : 3040세대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우선시하는 반면 50대 베이비붐세대는 소득증대 정책을 선호
 -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30대 중에서는 53.6%가 소득재분배 정책을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꼽음. 40대도 51.7%로 높은 수준
 - 반면 고도 성장기를 경험한 50대 베이비붐세대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소득증대 정책(47.9%)를 꼽음
 - 취업을 앞두거나 사회초년생인 20대도 상대적으로 소득증대 정책을 선호
- 종사상지위별 : 비정규직은 소득재분배 정책, 자영업자는 소득증대 정책을 선호
 -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증대 정책(29.6%)보다 소득재분배 정책(50.6%)을 선호하는 경향 존재
 -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증대 정책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5.8%로 높은 편임

< 계층사다리 강화정책: 연령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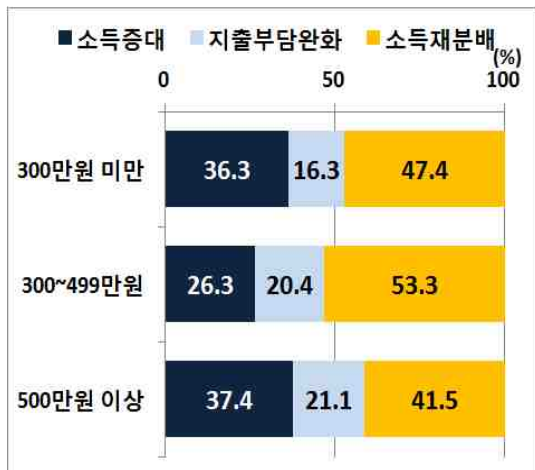
< 계층사다리 강화정책 : 종사상지위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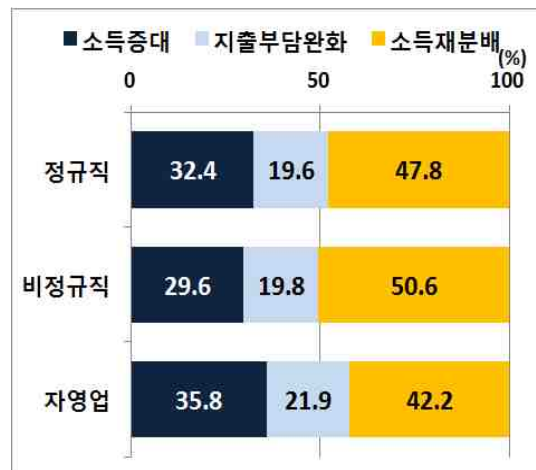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소득수준별 : 중소득층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은 소득증대 정책을 선호
 - 月소득이 300~499만원인 중소득층의 경우 소득재분배 정책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53.3%로 높은 반면 소득증대 정책은 26.3%에 불과
 - 月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재분배 정책은 41.5%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반면 소득증대 정책은 37.4%로 높은 편임
 - 月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47.4%, 소득증대 정책은 36.3%임
- 자산규모별 : 순자산 규모가 클수록 소득증대 정책을 우선시하고, 순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호
 - 순자산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소득재분배 정책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54.4%로 높은 반면 소득증대 정책은 29.1%에 불과
 - 반면 순자산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재분배 정책은 34.1%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소득증대 정책은 43.9%로 매우 높은 수준

< 계층사다리 강화정책: 月소득수준별 > < 계층사다리 강화정책: 순자산규모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3. 시사점

- 개인의 자발성과 경제사회적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
 - 첫째,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가계소득 증대 대책 마련
 -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위 일자리 열 개보다 좋은 일자리 하나가 더 중요.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토록 유도
 - 성공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 컨설팅 제공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정책 지속
 - 한편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가구나 장애인가구를 위해 사회보호제도 강화
 - 둘째, 연령별로 계층의식이 악화되는 이유가 상이한 만큼, 생애주기별로 생계부담 요인을 완화
 - 20~30대 : 임대주택 확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을 통해 신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40~50대 :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
 - 60대 :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부담 완화,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셋째,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기능이 가장 취약⁷⁾
 - 고소득층 세금을 확대하고 중산층·서민의 복지를 확대하되, '일하는' 복지가 되도록 제도 설계

7) 현대경제연구원(2014),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 경제주평 14-31.

- 넷째, 교육과 벤처를 통한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
 - 공교육 강화를 통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누구든 열심히 공부하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풍토 조성
 - 누구든 창의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벤처 활동을 한다면 계층상승이 가능하도록 벤처 생태계 조성

- 다섯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완화하는 등 일자리 상승 사다리 제고
 - 일자리의 질이 낮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나 자영업자보다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경우,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개인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임금, 4대 보험 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이용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별첨>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비중	응답자 특성		비중
전체	810명	100%		~300만원	24.2
성별	남성	50.9	소득 수준별	300~499만원	36.4
	여성	49.1		500만원~	33.3
연령별	20대	23.3	순자산 규모별	1억원 미만	19.5
	30대	25.6		1억~3억원 미만	31.2
	40대	25.1		3억~5억원 미만	15.3
	50대	26.0		5억원 이상	16.3
지역별	서울	20.7	가구주 직업별	정규직	58.8
	인천/경기	27.2		비정규직	10.0
	충청/호남권	24.9		자영업자	23.1
	영남권	27.0		기타	8.1
학력별	고졸 이하	31.1	가계수 지	흑자가구	34.2
	대졸 이상	68.9		균형가구	41.7
				적자가구	24.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